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9차시. 정보주체의 권리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2. 개인정보 열람권 및 정정권, 삭제권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청구권
5.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 학습목표

1.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 권리를 제한하는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 권리 행사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을 설명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다음의 다섯 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개인정보 처리정보 제공권),

둘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및 동의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개인정보처리 동의권),

셋째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확인 및 열람권(사본발급 포함)을 가지며(개인정보처리확인 및 열람권),

넷째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지, 정정·삭제·파기요구권을 가지고(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지 및 삭제 등의 요구권),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개인정보처리로부터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 구제받을 권리(개인정보처리 피해시 신속 구제권)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개인정보 처리정보 제공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에게 가장 먼저 보장되는 권리로 ‘개인정보 처리정보 제공권’을 규정하고 있다(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2항), 수집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법 제17조 제1항 1호), 나아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은 다른 말로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된다.

한편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으나, 제3자 제공도 가능하므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그리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2.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결정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즉 정보주체는 앞서 살펴본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의 범위를 선택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포괄적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되는 항목별로 동의 항목을 만들어 정보주체가 범위를 지정해서 선별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법 제18조 제3항 제5호). 이때 동의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는 주어진 동의를 철회하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법 제39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9조의7 제3항).

3.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열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앞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동의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처리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이용 또는 제공 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보유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도 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정정·삭제·파기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권의 대표적인 경우는 초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오남용의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초기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이 도달되면 개인정보는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정정 내지 삭제, 파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정·삭제 그리고 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8조의7).

5. 피해구제권

마지막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4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시 정보주체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에 대한 입증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처리 등을 하는 자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그리고 공정한 절차로 구제받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6.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이러한 다섯가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의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또한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열람권이 제한되게 된다(법 제35조 제4항).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요구권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법 제36조 제1항 단서).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법 제37조 제2항 단서). 물론 이러한 삭제요구의 거절 및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거절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II.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과 삭제권

1. 개인정보 열람권의 의의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개인정보 열람권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설령 자신의 동의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제3자가 보유 및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확실한 권리행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행사를 위한 전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열람요구권은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게도 적용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2항)

2. 개인정보 열람절차

1) 개인정보 열람요구 대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다 열람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 5개의 열람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열람요구의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즉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해야 하며,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3) 개인정보 열람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법 제35조 제3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0일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3.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 요건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유로는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권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4항). 이때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이란 다음을 말하며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용을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동법 제3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앞서 살펴본 동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에게도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제39조의14) 방송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정보서비스 보다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사업의 성격상 보다 많은 대중적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더 쉽게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5.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권

1)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6조 제2항). 물론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법 제36조 제1항 단서).

6. 개인정보 정정·삭제의 절차

1) 개인정보 정정·삭제의 요구 대상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의 요구대상은 자신이 열람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이 열람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문).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정정 또는 삭제의 요구방법 및 절차는 앞서 살펴본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아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및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36조 제2항). 이때 필요한 조치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는 물론 동 개인정보가 제공된 제3자 등에게 관련 사실의 고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3항).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43조 제3항).

4)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시 필요한 조치

만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3조 제2항).

7. 개인정보 삭제요구 금지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가 이처럼 다른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36조 제4항).

이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대상이 되어 정보주체의 삭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43조 제3항). 그리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32조 제2항).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서 정보주체의 요구만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되면 관련 법령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그 개인정보를 수집대상으로 명시하였다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제한되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물론 정정 및 삭제요구를 거부받은 정보주체에게는 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거부되는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거부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특례사항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을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법 제39조의7 제2항).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에게도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9조의14).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도 개인정보의 정정을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IV.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1.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정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의 하나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포괄적인 동의는 아니다. 즉 설령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에 대해 원하지 않는 처리가 있다면 이러한 처리에 대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에는 사생활 관련된 민감정보가 응축되어 있으므로 자칫 오·남용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의 방법도 현재시점에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꾸준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원하지 않는 처리에 있어서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함이다.

2.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대상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대상이 다르다. 즉 민간부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지만,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이다(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이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에서 제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법 제32조 제2항).

3. 처리정지 요구의 절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요구, 이러한 요구에 대한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7조 제5항).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정지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처리정지의 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아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의무지우고 있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4. 처리정지 요구시 대응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33조 제1항). 그리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4항).

또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5.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나,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2항).

V. 손해배상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청구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때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법 제39조 제1항).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동법 제39조 제3항으로 2015년 7월 24일 신설되었다(징벌적 손해배상). 기존의 손해배상과 달리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신

설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은 2014년 당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VI.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1.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강화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2015년 7월 24일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39조 제3항)과 법정 손해배상(제39조의2)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의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오늘날 정보통신서비스는 다자간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1인 미디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도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제39조 제3항)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법 제39조의2)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된 내용이 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동법 시행령 제48조의7로 2020년 2월에 신설되었다. 이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2.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을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가입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제1항). 나아가 가입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동 시행령 별표 1의4).

[표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매출액	이용자 수	
800억원 초과	100만명 이상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800억원 초과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800억원 초과	1천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